

민주 “강제동원 배상안 규탄 국회 결의안 추진”

제3차 변제 “망국적 배상”
대일 굴욕 외교대책위 구성
지도부, 11일 규탄 촛불집회
광주시당, 오투청 집회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및 규탄 결의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배상안은 사실상 대일 항복 문서다. 오죽하면 일본에서조차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대승적 결단, 한국 주도의 해결책이란 궤변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본이 할 수 있는 한계치였다고 표현했는데, 도대체 일본이 뭘 했냐. 참으로 기가막힐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금이라도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을 철회하고 피해자 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

전과 일본정부의 사죄가 들어간 정당한 해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그 전제조건은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고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임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현 정권이 역사의 해석과 평가권을 틀어쥐고 있는 것 같

지만 역사는 국민이 써내려가고 국민이 정권을 심판한다”며 “역사는 오늘의 사태를 제2의 경술국치인 ‘계묘국치’로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제동원 해법 관련해 당내에 ‘대일 굴욕 외교대책위원회’라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4선 김상희 의원을 임명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특위 구성 배경에 대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제3차 변제 등 윤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에 적극 개입하기 위해서”라며 “시민사회에서 하고 있는 움직임들도 있어 보조를 맞춰 나가면서 할 것”이라고 말했

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예정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 관련 규탄 촛불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대 주69시간 노동이 가능케 한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도 우리는 OECD 국가 중 평균 200시간 이상 일하는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그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 사망률과 사고율이 최고수준”이라며 “정부의 계획대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면 국민들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 사항인데 국회와 사전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과 제대로 된 당정 협의도 없이 윤석열 정부의 설익은 노동시간 개편안을 국민 앞에 들이밀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같은 날 오후 3시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야당 탄압 검사 독재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규탄대회에는 광주시민을 비롯해 이병훈 시장위원장(동남을)과 당 지도부, 지역위원장,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핵심당원 등 1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미래 “李, 당의 불신 해소·혁신 적극 나서라”

15일 李 대표와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미래(더미래)’는 8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사태 이후 당 내 흥과 관련해 “이 대표가 당의 불신 해소와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더미래는 이날 ‘당 내 상황 및 향후 진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당의 신뢰 회복, 혁신, 단결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단합된 힘으로 50억

클럽 특검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중심 정당,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강한 야당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미래는 그러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하며, 민주당의 단결을 위해 당 내 여러 의견 그룹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미래는 이같은 입장을 이 대표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3시 이 대표와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오섭 ‘자동차사고 선손해사정제’ 정책간담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사진)이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동차사고 선손해사정 제도 도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병욱, 박상혁, 장철민 국회의원과 한국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 연합회가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좌장은 최병규 한국보험법학회 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았고, 유주선 교수(강남대 공공인재학과)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는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

대표,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김영산 손해보험협회 부장, 장현준 우리자동차정비(주) 대표, 이진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 이형준 변호사가 맡았다.

또 공보 등촌정비센터 대표와 이한나 금호공업사 부장이 ‘선’ 수리 ‘후’ 손해사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강은미 “기재부, 광주의료원 설립 타당성 통과시켜야”

강은미(사진) 정의당 의원은 8일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주와 울산 시민들은 코로나19 의료재난을 겪으며 지역 공공병원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기재부는 공공병원 확충과 강화를 위한 시민들의 열망에 타당성 재조사의 조속한 통과로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번 타당성 재조사가 감염병 관리나 보건사업 추진 효과 등 편의 항목이 추가 적용되는 첫 사례인 만큼, 병상 규모 역시 광주와 울산 의료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요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정책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적정 규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등과 함께 공공의료 확충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김선욱 기자

윤 대통령, 4월말 美 국민 방문... 바이든과 정상회담

한국 정상 12년만... 동맹 7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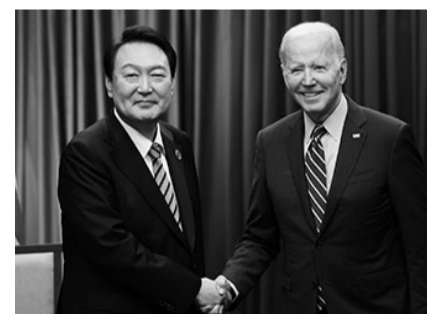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이 4월말 미국을 국민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민 방문은 지난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4월말 미국을 국민 방문할 예정이라고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민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이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및 4월26일로 예정된 국민 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할 예정이다.

김 수석은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양 정상은 지난해 5월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간) 프놈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1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합방위 태세 및 확장 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 안보, 문화·인적 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 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의 국민 방문은 6차례 이뤄졌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 1965년 박

정희 대통령, 1991년 노태우 대통령, 1995년 김영삼 대통령, 1998년 김대중 대통령,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와 관련, 방미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윤 대통령 국민 방문을 계기로 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폴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 등과 면담 △경제안보 △양국 간 인적 교류 △북핵 대응 △경제 교류 등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미국의 산업 정책 이행 과정에서 주요 동맹인 한국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9급 공무원 경쟁률 22.8대 1... 31년 만에 최저

“고교선택과목제 폐지 영향”

올해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공채) 시험 경쟁률이 3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9~11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326명 선발에 총 12만1526명이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자 수는 지난해의 16만5524명에 비해 4만3998명 감소했다.

경쟁률은 22.8대 1로 지난 1992년의 19.3대 1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

2016년 53.8대 1에서 2017년 46.5대 1로 떨어진 뒤 7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모집 분야별 경쟁률을 보면 행정직군은 4682명 모집에 10만5511명이 지원해 22.5대 1, 기술직군은 644명 모집에 1만6015명이 접수해 24.9대 1로 집계됐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9세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57.3%)가 가장 많고 30대(33.7%), 40대(8.1%), 50대 이상(0.9%)이 뒤를 이었다.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은 한때 93.3대 1까지 치솟았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경직된 조직문화와 낮은 보수

등의 영향으로 꿈의 직장으로 여겨져 왔던 공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낮아진 실정이다. 여기에 주된 응시자인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고졸 출신의 공직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고교선택과목제 도입이 폐지된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개인사채 분석이다.

9급 공채시험 지원자 수는 2010년~2012년 평균 14만7000명에서 고교선택과목제가 시행된 2013년~2021년 평균 20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제도 폐지 후 평균 14만4000명으로 줄었다.

한편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5월17일 발표된다. 시험 장소는 이달 3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